꽉 막힌 '5·18 난제' 5월 오기 전에 풀릴까

여야, '5·18 진상조사위 구성' 등 물 밑 조율 활발

민주, 5·18 피해 당사자 1명 교체 … 비호남·여성·법조인 고려
한국, 靑 거부자 중 1명 바꿔 … '망언 3인방' 징계 4월 마무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 구성을 놓고 물 밑 조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있어 기존의 대치 국면을 벗어나 한 걸음씩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로서 제척 사유에 포함되는 조사위원 가운데1명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교체 대상으로는 이윤정 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송선태, 안종철 위원 등도 제척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존에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모두 광주·전남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조사위원은 타지역 출신에, 여성, 법조인의 조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5·18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 물 밑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청와대가 거부한 2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1명을 교체하고, 1명은 자격을 보완해 재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5·18 망언 당자자들에 대해 징계를 5월 이전에 마무리 짓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과 미래'를 화두로 제시한 황교한 대표 체제에서 5·18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마냥 미루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제명은 어렵다는 점에서 당원권 정지 수준으로 징계를 마무리 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 징계를 마무리 짓지 않고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징계로 망언 논란을 마무리 짓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사퇴, 공석인 상황인데다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당내 인사들의 반발 등도 예상되고 있어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표류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 5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 징계안, 재판 청탁 의혹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양당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장훈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징계안 심의기간이 만료돼 할 수 없이 연장 요청을 윤리위 자문위에서 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에서 연장을 허용하면 자문위는 오는 17일과 내달 3일, 9일에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된 징계 사항은 본회의에 올려 처리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정 100주년, 정부청사 외벽의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나흘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D-3' 북미협상 동력 되살리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 타개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회담은 하노이 담판 이후 급격히 저하된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서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의 목소리를 앞세우면서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거듭 시사하고 나서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기대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북미가 대화의 출발선에 다시 설 채비를 갖추더라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지에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일괄타결론', 북한은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큰 그림'에 합의토록 한 뒤, 서로 접점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즉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놓고 이를 이루는 과정은 북한과 미국 간의 주고받기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한다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을 만나거나 대북특사를 보내 북한이 큰 그림의 비핵화 합의에 호응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핵심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한미는 60년이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비핵화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야권에서 솔솔 부는 정계개편 바람

한국당, 바른미래 당내 갈등 심화에 '보수대통합' 공론화
평화당, 정의당과 교섭단체 갈등 '제 3지대' 논의 가속화

4·3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보수통합론'과 과거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통합하는 '제3지대론' 등이다. 특히 4·3 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평화당에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정계개편론에 탄력이 붙고 있다.

우선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보선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부르고 있다. "깨끗하게 갈라서자"(이찬열 의원)는 말까지 나왔으며 광주·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은 "올 것이 왔고 시기가 문제"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04표로 석패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 아래 보수통합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반면 호남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의 이념·정체성 갈등을 반복해온 바른미래당이 결국 패스트트랙 결정 과정에서 분열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도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의총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정적 의견들이 상당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전멸'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있다.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호남 의원들 간의 제3지대 정계개편론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여권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실망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만으로는 개혁 진보 정권 재창출이 어렵고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는 호남 정치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강한 제3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미래당과 평화당 호남 의원들에게 제3지대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결국, 오는 추석을 앞두고 호남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 · 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홍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1588-1543 · 010-3645-1479